



5일 오전 광주시청 추진기획단 사무실 앞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준호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속 마련"

강기정 시장 주재 추진기획단 첫 실무회의

'민관합동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 추진

광주시가 민관합동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특별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제1차 실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강기정 시장은 첫 실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남도가 행정통합에

동의했고, 이제 명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행정역량을 집중해 행정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은 시민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인 만큼 행정·재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서 이날 광주시정과 시의회에서 기자들을 잇달아 만나, "9일 대통령 간담회 이후 법안 처리는 빠르게 하자고 정령래 민주당 대표와 이야기했고, 지금 준비를 시작했다"며 "어떤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선 "주민투표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현법적 가치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대전 사례를 보면 비용만 500억 원이 드는 등 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동의 방식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선

택지"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행정통합 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남특별시도 좋고, 광주란 명칭도 의미 있고 좋다. 하지만 행정통합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선 "주민투표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현법적 가치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대전 사례를 보면 비용만 500억 원이 드는 등 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동의 방식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추진기획단은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양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조와 명확한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실제 추진기획단은 행정통합 관련한 각종 실무와 소통 등을 전담하는 조직(TF)으로,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추진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협의체 세부 구성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내 발족하고, 쿠프 회의 개최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논의 구조, 운영 원칙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통합 논의와 실행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 1층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사무실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행정통합을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 국비 1000억 확보

노벨문학센터·K-디즈니 인재양성 등 K-문화 대거 반영

전남도는 올해 정부예산에 K-노벨문학센터 건립과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 기관 조성 등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 기반을 될 K-문화 핵심 사업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국비 확보는 K-컬처 300조 시대에 발맞춰 문화창조산업에 선제 대응하고,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향유 인프리를 확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남도 문화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할 기반을 마련했다.

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9500원→1만원으로 인상

광주, 극한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복구 문흥동성당·복구청사거리 등 상습침수지역

국비 40억 투입…안전기반시설 확충 단계적 추진

광주시는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급식비 단기를 올해부터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최근 물가상승 등 외식비 수준을 고려해 아동들이 보다 규형 접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급식비 권고단가(1만원)를 선제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약 1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복지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전화·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우단체 급식 운영 조건을 고려해 급식단 기를 기준 85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로, 남도 문화가 지속해서 융성할 제도적·구조적 여건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문학의 세계적 가치를 조명하는 K-노벨문학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인상해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구례 화엄사 구총암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조성해 죽로 아생자 다도 체험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22개 시군 306건의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방침이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케이팝 데몬 터스' 등으로 확산한 K-컬처의 세계적 열기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전남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콘텐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글로벌 문화산업 인재를 배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남도 문화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지를 밝힌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최적기"

라고 덧붙였다.
통합 과정의 이전에 대해서는 '선(先) 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생활에 드리는 금"을 통해 "역사적 한 뿐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거울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도권 1극에서 5극 3극으로" 국가 성장지도를 개편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원의

이상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때 빗물 유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해 인근 주거지역 침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구청사거리 일원에는 10억 원을 투입한다.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약 1만2700t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도로와 인근 상가 침수 우려가 커던 곳으로, 사업 완료 때 교통 기능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시 방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



호에 힘쓸 방침이다.

김준영 시 시민안전실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기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이 된 상황에서 도시 안전 기반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난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불법 당원모집' 강진군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박병규 광산구청장 '혐의 없음'

청구한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혐의 없음' 취지의 결정을 했지만 최고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징계는 경질계와 중징계로 나뉜다. 경질계는 경고·당직 자격정지, 중징계는 당원 자격정지·제명 등이다.

한편, 관련 의혹이 일었던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혐의 없음' 결정을 받으며, 누명을 벗게 됐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 측은 "아직 중앙당 등으로부터 아무런 결과를 통보 받은 게 없다"면서도 "당초 이번 불법 당원모집 의혹과는 무관하다.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재심을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